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체제전환 추진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이라는 9월 9일을 맞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역대 최대 10kt의 위력으로서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가 거의 완성단계에 왔고, 이미 운반수단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사실상 보유하게 되어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70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자행된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의 핵국가 지위 획득 의지가 요지부동이고, 기존의 수세적 방어적 방식의 대북 제재와 봉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핵 위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북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수령절대주의 김정은 체제를 흔들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터잡아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낱알이 기록하고 알려져 처벌을 경고함으로써 김정은과 여타 간부들을 차별화 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권 퇴진의 기수가 되도록 한다. DVD·USB 등 대량 전자통신수단(정보폭탄) 공급 등을 통해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해서 주민들 스스로 체제전환을 통해 김정은의 핵 폭주를 막도록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COI 권고에 따라 김정은 등 핵심 반인도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에 긴급 소집된 안보리에서는 중국이 더는 북한을 봐 주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불법교역도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어제 국방부가 발표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당연한 자구 조치이고, 나아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조건부로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등 핵무장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넷째, 어느 때보다 내부단합이 중요하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망국적인 국론분열과 사대주의적 사고, ‘우리 집 마당에는 안 된다’는 부끄러운 님비(NIMBY) 현상은 즉각 불식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내 정치권은 여야 단결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가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권 다툼도 공허한 것이다. 우리 내부의 일치된 목소리가 이번 사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2016년 9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